



강북구의회  
GYEONGBUK DISTRICT COUNCIL

# 의정활동보도

2015년 4월 27일  
(월요일)

동북일보 4면

## 이용균 의원, 일본 교과서 왜곡 만행 규탄 결의문 발의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중단과 일본의 올바른  
역사교육 촉구

지난 강북구의회 제188회 임시회 폐회를 앞두고 이용균 의원은 일본교과서 왜곡 만행 규탄 결의문(안) 발의에 대해 제안 설명에 나섰다. “독도는 일본 땅인데 한국 정부가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일본 중학교 교과서 18종이 4월 6일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하여 2016년 4월부터 일본 중학교생들은 역사왜곡 교과서로 역사를 배우게 된다. 동북아역사재단 등이 공개한 바에 따르면, 이번에 일본 문부과학성이 검정을 확인한 교과서들 가운데 지금까지 독도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거나 독도를 지도로만 표시하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던 7종의 교과서도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대한민국의 유구한 역사와 함께 이어온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하여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대한민국 주권에 대한 명백한 영토 침탈 행위이며 도발이다.

이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는 34만 강



북구 주민을 대표하여 일본이 왜곡된 역사관을 학생들에게 주입하는 것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는 것과 다름없이 일본 정부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함과 동시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중단하고 일본의 올바른 역사교육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용균 의원은 “우리가 명백히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고유영토 독도에 대해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이를 분쟁지역으로 만들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려는 것은 대한민국 주권에 대한 중대한 침탈 행위이자 도발이다” 고 말했다.

이용균 의원은 강북구의회는 일본 정부가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해 잘못된 영토관념을 주입하는 왜곡된 역사 교육을 즉각 중단하고, 일본

교과서에 기술된 “독도는 일본 영토 또는 한국의 독도 불법 점점” 를 즉각 삭제할 것을 촉구한다.

강북구의회는 이번 일본 교과서 왜곡 사태와 관련하여 일본 정부는 침략전쟁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과 책임의식을 갖고 과거 제국주의 이념을 합리화하고 미화하며 동북아시아에 형성된 신 냉전적 갈등구도를 강화하는 일을 즉각 중단하고 주변 국가들과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역사교과서가 신뢰를 바탕으로 사실에 근거하여 편찬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강북구의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에 대하여 재발방지와 일본의 왜곡된 역사교육을 바로잡는 외교적 활동을 강화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이고 단호한 대책을 신속히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강북구의회는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이며 어느 나라도 영유권을 주장할 수 없음을 재천명하며, 독도 침탈 행위가 계속될 경우 34만 강북구민은 독도 수호에 온 힘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라고 밝혔다.

(박은주 기자 jej1718@naver.com)